『노동리뷰』 7월호 - 이슈분석

■ “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- 고용 양극화를 중심으로”
(전병유 연구위원, 김복순 연구원)

- 1990년대 이후 고용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특히 2000년 이후에도 다소 완화된 형태로 양극화는 지속되고 있음.
-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은 여성이나 청년층의 저임금일자리로의 진출 확대와 같은 노동공급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,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 증가와 같은 노동수요 차원의 문제로 판단됨.
- 고용구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제의 효과적 활용, 중위수준 일자리 창출 및 저임금일자리 감소정책, 저소득층 대상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및 산업정책과의 결합 등이 필요함.

문의처 :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연구위원, 김복순 연구원
Tel : 782-0576 E-mail : byjeon@kli.re.kr

*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(http://www.kli.re.kr)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KLI 한국노동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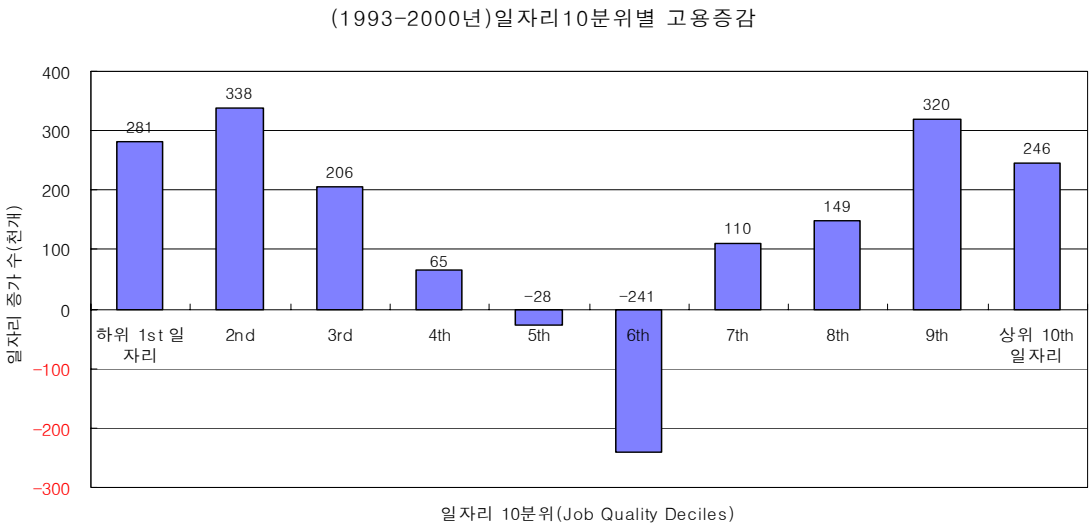
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- 고용 양극화를 중심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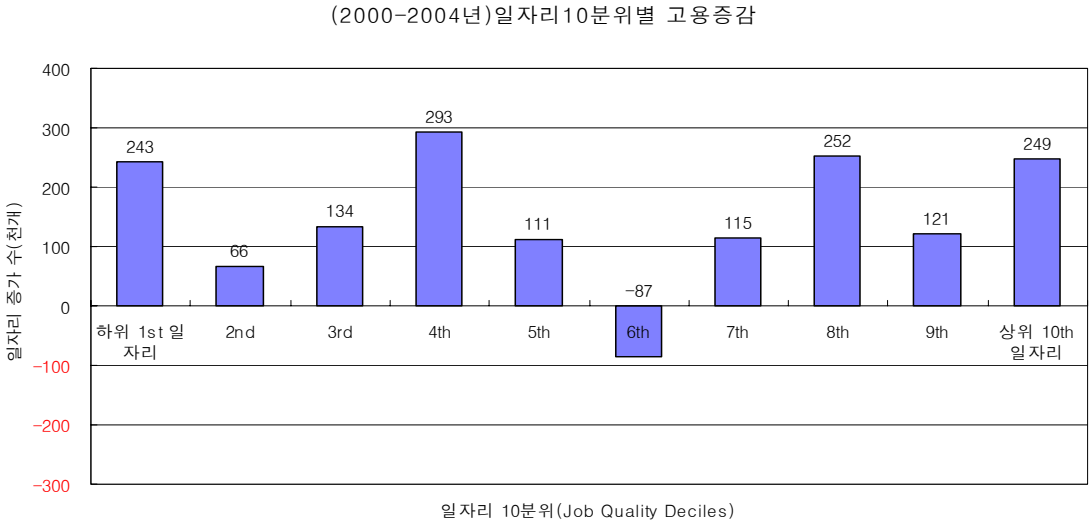
담 당 자	전병유 연구위원 김복순 연구원
전 화	02)782-0576

○ 노동시장 양극화 양상을 실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을 얻을 수 있었음.

※ 노동부의『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』및『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』원자료를 통계청의『경제활동인구조사』원자료와 결합하여 고용 및 임금의 변화를 살펴봄.

〔그림 1〕 일자리10분위별 고용증감





1. 하위일자리의 비중이 큰 U자형 고용 양극화 진전(그림 1 참조)

- 1993~2000년간 상위 5개 분위와 하위 5개 분위 일자리가 각각 585천개, 862천개씩 늘어나 전체적으로 나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음.
- 2000~2004년의 경우 고용 양극화가 이전 기간에 비하여 약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중간일자리 보다 상·하위 3개 분위 일자리수가 더 증가하는 양극화가 지속됨.

2. 중위 일자리에서 남성의 고용감소가 양극화 심화에 기여

- 여성들의 하위일자리로의 진출 경향이 심화되고 있지만 상위와 중위일자리에서도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확대됨.
- 오히려 고용구조 양극화 심화는 중위일자리에서 남성의 고용이 크게 감소한 데에 기인함.

3. 청년층의 중위일자리 감소로 인해 청년층 고용 자체가 양극화됨

- 청년층의 상·하위일자리로의 진입으로 인해 고용 양극화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청년층에게 중위일자리 기회가 줄어들면서 청년층 일자리 자체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

4.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으로 인한 고용 양극화 심화

- 제조업은 상·하위일자리에서 고용이 약간 증가하고 중간 분위에서 고용감소가 큰 J자 형태의 고용변동을 나타낸 반면, 서비스업은 전분위에서 고용이 증가하지만 상·하위일자리에서 고용증가가 더 큰 U자 형태의 고용변동을 보임.

5. 고용형태에 따른 양극화 심화

- 비정규직은 상·하위일자리의 고용증가 폭이 큰 양극화된 형태의 U자형 고용변동을 하고 있는 반면, 정규직은 중하위일자리에서 고용감소가 나타나고 상위일자리에서 고용증가가 나타나는 J자형 고용변동을 보임.
- 1993~2004년은 하위일자리에서 임시·일용직 형태의 고용이 확대되고 중위일자리에서 상용직 형태의 고용이 줄어들면서 고용구조가 양극화됨.
- 2000~2004년의 경우 파트타임 형태의 고용이 확대되면서 하위일자리가 증가하였고 상용직 형태의 고용이 확대되면서 상위일자리가 확대된 것이 고용구조를 양극화함.

○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설정해볼 수 있음.

1. 최저임금제도의 효과적 사용

- 소득보조정책(국민기초생활보장, 근로소득세 감면, 사회복지분담금 면제 등)과 근로빈곤층 일자리의 가격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(최저임금제)과의 결합

2. 중위수준 일자리 창출 및 저임금일자리 감소정책

- 중간수준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의 고용창출 전략 및 민간고용 창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개발을 통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개인서비스 관련 직종의 저위일자리를 대체

3. 저소득층 대상 교육 및 훈련정책의 강화 및 산업정책과의 결합

- 저소득층이 숙련향상을 통해 노동시장 내에서 상향이동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산업정책(중위수준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)과 연결시키는 방식의 결합